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의 안 변 호	14857
------------	-------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윤호중 · 강득구 · 강민정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김교홍 · 김남국 · 김두관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김수홍 · 김승남 · 김승원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김윤덕 · 김의겸 · 김정호
김종민 · 김주영 · 김진표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김희재 · 남인순 · 노웅래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박 정 · 박주민 · 박찬대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서영석 · 설 훈 · 소병철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유동수 · 유정주 · 윤건영
윤관석 · 윤영덕 · 윤영찬
윤재갑 · 윤준병 · 윤후덕
이개호 · 이광재 · 이동주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현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H)
이수진 · 이용빈 · 이용선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전재수 · 전해철 · 전해숙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조승래 · 조오섭 · 조용천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진성준 · 천준호 · 최강욱
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최혜영 · 한병도 · 한정애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황희의원(172인)

주 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추진과정, 특히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2.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설립, 입찰, 선정, 계약, 투자자 또는 투자금 모집 및 배당, 대출을 통한 자금 조성 과정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횡령·배임 및 불법대출 알선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

혹사건

3. 수사기관이 제2호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탁 및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특혜 제공, 수사무마 등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4.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일부가 특정인이나 그 친인척의 부동산매입에 사용되는 등 일부를 횡령·배임하여 법조 인사 등에게 로비한 의혹사건
5. 윤석열 후보 가족과 대장동 관련자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
6.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윤석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주체 등이 범한 불법대출·배임·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각종 청탁 등으로 인해 특혜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히 윤석열 후보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되었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음.

한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한 상황임.

21년 10월 대장동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들에 대해 피고발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오랜 시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한 윤석열 후보자의 경력과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임.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방식에 대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나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어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개발 비리,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부정부

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엄단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